

교육관련업자 교육위원 안된다

친·인척 납품업체 운영 후보자 많아 “당선편 이권개입 불보듯” 비난 여론

오는 31일 치러지는 광주시·전남도교육위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일부 후보의 친·인척이 학교급식·교구납품 등 교육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격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교육관련업 종사자들은 초창기 교육위원회 구성 당시 ‘전문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활동했으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문성을 잇속 쟁기에 사용한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위원회에 출마하는 A씨의 딸이 학교급식 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A씨의 딸은 A씨가 교육위원에 당선된 이후 급식업체를 운영했으며, 최근 광주 모 중학교 급식재료 납품 업체로 선정되는 등 광주지역 여러 학교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A씨는 이외도 지인이 2~3년 전까지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운영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위원 선거에 나서는 B씨는 학교 건물 신축과 증·개축과 밀접한 건설 관련 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위원에 출마 예정인 C씨의 조카도 과학학습기자회 회사를 운영하며 전남지역 여러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다. D씨는 학원을 운영하

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교육관련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일부 인사들이 교육위원에 출마하면서 이들이 당선될 경우 수주나 납품 등 예산확보 단계부터 압력을 가해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도교육청의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 ‘교육계의 국회의원’으로 불리는 교육위원의 친·인척인 만큼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선 ‘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주·전남교육연대 최은순 정책실장은 “친·인척이 교육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교육위원 출마 예정자의 경우 당선되면 경쟁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챙길 것이 뻔하다”면서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출마 예정자 스스로 과감하게 주변을 정리하는 자기 검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교육관리 C씨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교육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교육감이나 고위 간부들 중 이들의 청탁에 시달리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1일 치러지는 광주시·전남도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인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설명회에 나섰다. 19일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관의 부정·불법선거 예방 및 단속 방향 등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10월 교육감 선거 맞물려 광주 교육위원 선거 과열

교육위원 선거 중 특히 광주지역 교육위원 선거전이 치열한 것은 이번 선거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광주시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함에 따라 역시 학교운영위원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지지 세력(학교운영위원)을 가진 교육위원이 일종의 ‘패키지’로 교육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 선거전이 벌어지기 훨씬 전인 지난해 말부터 광주

교육감 선거전은 물론 작업이 한창 진행돼왔다.

일부에서는 광주지역 교육위원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 몇몇이 교육감 출마 예정자와 연대해 자신의 당선은 물론 학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광주 교육감 후보는 안순일 광주 동부교육장과 운영위원장,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윤봉근 광주서부교육장, 김창현 전 광주교대 총장, 이정은 전 광주교대 총장, 윤봉근 광주서부교육장, 김창현 전 광주교대 총장, 윤봉근 광주서부교육장 등 5명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학운위원 광주 3,413명 전남 8,126명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실시하는 교육위원선거의 선거인 수는 광주가 3천413명이며, 전남은 8천126명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위원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오는 2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 관계자는 “선거인은 소

속 학교 및 관할 선관위에 비치된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의 경우 학부모 위원 1천500여명, 교원위원 1천200여명, 지역위원 6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원위원 중 전교조 소속은 45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지역 與국회의원들 박시장 고소 파문

부끄러운 ‘치고 받기’ 현안사업 차질 우려

광주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고소 사태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양측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당장 내년도 광주시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방선거 쌓인 불신 끝내 범정으로 “정치력으로 왜 못 푸나...” 비난 고조

◇고소 사태 원인배경=일단 이번 고소 사태의 원인은 박광태 광주시장이 지난 6월 22일 광주지역 한 방송사의 토론회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발언이 원인이 됐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박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며 반발했고, 박 시장은 ‘예산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정치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광주지역 의원들이 검찰 고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그만큼 박 시장과의 불신의 골이 깊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정치적 성장 배경과 담적이 다른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박 시장은 그동안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 각종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 갈등을 보여왔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지난 5·3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대해 광주 R&D(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무산됐

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박광태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데 맞서 박 시장이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였던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 결국 양측의 갈등이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클어졌다.

◇고소 사태 파장=검찰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박광태 광주시장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현안 사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의 입장으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나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갈등으로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예산 국회에서의 광주시의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박광태 광

주시장과의 갈등으로 국회와 광주시의 공조가 무너져 예산 확보에 애를 먹었다”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정치력 부재=이번 고소 사태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를 극명하게 나타냈다는 평가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어쩔쩔 넘어간다면 시민들이 박 시장의 주장을 믿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박 시장에 대한 고소를 강행했다.

그러나 여론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갈등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광주의 미래를 위해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한 걸음씩 물러나 상생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검소한 시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갈등 관계도 박 시장이 보다 진솔하게 나섰다면 고소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나 결정보다는 광주지역 의원들과 박 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이해를 풀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 협력을 다짐하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위직부패 전담 ‘공수처’ 수면위로 청와대 범조비리 계기 설치 필요성 제기

청와대가 20일 최근 또 다시 불거진 범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고위직 부패를 전담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 필요성을 재삼 주장하고 나섰다.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되풀이 되는 범조비리,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공직 부패를 척결하려는 국민적 요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은 범조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그 결과를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법조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넘어서는 외부

의 견제나 감시제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수처가 관·검사와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반대 사유로 보고 여야에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